

#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9
----------	------

제출연월일 : 2024. 8.

제출자 : 하 남 시 장

### 1. 제안이유

- 하남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명확·상세하게 정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 추진에 만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각종 스마트도시 시책 수립·시행 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의2)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내용, 시민의견, 민간 부문과의 협력, 최신기술의 검증, 도입 및 확산 등 고려해야 할 사항 명시
- 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을 상세하게 정비(안 제3조)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 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함과 목표연도는 5년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
- 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 신설(안 제5조)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사업 시행자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함과 인·허가등의 의제 처리 방법을 명시
- 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 관리·운영, 도입·제공 방안에 관하여 보완 규정 마련(안 제6조~제9조)
- 체계적인 유지관리, 통합적·효율적 제공, 통합 보안체계 구축, 담당부서·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시설(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포함) 및 서비스 관리·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서비스 도입 시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관리하고 업무 주관 부서장과 협의해야 함을 명시

- 마.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실무협의회, 시민협의회, 자문단 구성·운영  
방안에 관하여 규정 보완·신설(안 제11조~제20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정책적인 결정이 아닌 안전의 실무적·기술적 협의를  
위한 기구이므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구성 방안 일부 변경
    - 위원장: 시장 → 부시장/부위원장: 부시장 → 위원 중 호선/공동위원장 폐지
    - 당연직 위원: 관련 국·단·소장 및 주관 부서장 → 관련 과장 및 주관 국장·부서장
  - 시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시민협의회 운영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시민  
협의회,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수당, 자문 수수료 등의 지급 근거 명시

### **3. 개정조례안: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 **5. 예산수반 사항: 덧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7. 참고사항: 덧붙임**

- 현행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개정 부분 표기)

### **8.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 기간: 2024. 6. 28.~2024. 7. 18.(20일간)
- 나. 의견 내용: 의견 없음

### **9.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의견 없음
-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동의

### **10. 관련부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

##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남시의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를 “하남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정의)”를 “(정의 및 적용 대상)”으로 하고, 본문 중 “(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르며, 적용 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각종 스마트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내용
2. 스마트도시 시책 수립·시행 과정에 대한 시민 의견
3. 스마트도시 최신기술 검증 및 기술 표준화를 위한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의 협력
4. 안전,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신기술의 검증, 도입 및 확산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스마트도시계획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계획법 제18조에 따른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점 및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승인)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직접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를 따른다.

제6조의 제목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스마트도시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  
트도시기반시설의”를 “시설·서비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  
운영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민간업체에”로, “스마  
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을 “위탁하여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각각 “시설·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이하  
“시설·서비스”라 한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 통합적·  
효율적 제공, 통합 보안체계 구축, 담당부서·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고려하여 시설·서비스를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시설·서비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 통합적·효율적 제공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 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하남시 스마트도시 통합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의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쉽도록 센터를 설치하되, 관련 통합시설과의 안전성·효율성·확장성·호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서비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등의 보안 및 정보보호 그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제공) ① 시장은 최첨단 스마트도시 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신기술의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센터와 연계하여 도입하고 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장은 해당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 기준 및 방법 등을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를 “(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스마트도시서비스” 를 “시설·서비스” 로, “관계기관” 을 “관계 기관” 으로, “구축 할” 을 “구축할”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기관과의” 를 “관계 기관과의” 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사업” 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로, “위해 “하남시” 를 “위하여 하남시” 로 “한다)” ” 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의 “필요한” 을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협회의 구성)” 을 “(협회 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으로, “위원은” 을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를 “협회를 대표하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을 “협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으로,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국·단·소장 및 스마트 도시업무 주관” 을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부서장 및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을 “의원” 으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13조 본문 중 “위촉되는 위원” 을 “위원” 으로, “있다” 를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해촉(解囑) 할” 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의거 해당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고려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위원회에” 를 “협의회에” 로, “위원회는” 을 “협의회는”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원장이” 를 “시장 또는 위원장이” 로, “그” 를 “위원장은 협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회의개최 3일 전 까지” 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메일” 을 “전자우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 를 “협의회의” 로, “간사를” 을 “간사와 서기를” 로, “팀장이” 를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관계기관의 협조)” 를 “(관계 기관의 협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스마트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를 “관계 기관·단체”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를 “협의회 운영 지원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로, “관련기관·부서”를 “담당부서·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무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민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지원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시행 과정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지원과 스마트도시 최첨단기술 검증,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시민협의회·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자문 수수료, 연구·조사소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도시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정 황 근
	팀장 직위·성명	스마트시티팀장 김 정 순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 우 영 (031-790-509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하남시의 스마트 도시 조성</u> 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하남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2조(정의 및 적용 대상)-----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르며, 적용 대상은 법 제3조를 따른다.
<신설>	제2조의2(책무) <u>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각종 스마트도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스마트 도시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내용
	2. 스마트도시 시책 수립·시행 과정에 대한 시민 의견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① 하남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스마트도시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스마트 도시법 제19조의5에 따라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정보의 제공을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하남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 적인 도시의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

3. 스마트도시 최신기술 검증 및 기술 표준화를 위한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의 협력

4. 안전,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신기술의 검증, 도입 및 확산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계획법 제18조에 따른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점 및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운영이 쉽도록 센터를 구축하되, 관련 시설과의 안전성 · 효율성 ·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 시설에 대한 관리 · 운영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등의 보안 및 정보보호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 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 ·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제5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 승인)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직접 수립하거나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 ·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를 따른다.

제6조(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

관리 ·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이하 “시설 · 서비스” 라 한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 통합적 · 효율적 제공, 통합 보안체계 구축, 담당부서 ·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고려하여 시설 · 서비스를 관리 ·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설 · 서비스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거나 전문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제7조(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법 제19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수수료의 면제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다.

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③ -----  
시설·서비스-----  
-----  
-----.

④ 시설·서비스-----  
-----  
-----  
-----, <후단 삭제>

제7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시설·서비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 통합적·효율적 제공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 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하남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의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쉽도록 센터를 설치하되, 관련 통합시설과의 안전성·효율성·확장성·호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① 시

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

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저장·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등의 보안 및 정보보호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제공)

① 시장은 최첨단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신기술의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센터와 연계하여 도입하고 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장은 해당 스마트도시 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 기준

보관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을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① 시장은  
센터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하남시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 3. (생략)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  
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  
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및 방법 등을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① ---  
----시설 · 서비스-----  
-----관계 기관-----  
-----구축할 ----.

② -----  
-----관계 기관과의-----  
-----.

제11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위하여 하남시-----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5.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국·단·소장 및 스마트 도시업무 주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 7. (생략)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解屬)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협의회를 대표하며-----  
-----.  
-----.

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스마트 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부서장 및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

1. (현행과 같음)

2. -----  
의원

3. ~ 7.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  
-----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삭제>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  
-----  
-----해당 위원을 해촉할-----.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생략)

제16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 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협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메일, 메시지 등의 정보통신 수단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생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의거 해당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고려하여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협의회에-----  
-----협의회는-----  
-----.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장은 협의회의-----  
-----.

② -----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  
-----.  
-----  
-- 전자우편-----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실무협의회 운영) 시장은 스마트 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 협회의-----  
간사와 서기를-----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기관·단체-----  
-----  
-----  
-----.

제18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운영 지원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담당부서·관계 기관--  
-----  
-----.

② 실무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의2(시민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지원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시행 과정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시에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 도시 구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생 략)

② 시민협업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지원과 스마트도시 최신 기술 검증,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시민 협의회·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자문 수수료, 연구·조사소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현행과 같음)

#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시민협의회, 자문단 운영과 관련한 수당, 여비, 자문 수수료, 연구·조사소요 실비 등의 지급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

-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4. 작성자: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장(정황근)**

## 관계법령 발췌서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

[시행 2022.12. 1.] [법률 제18522호, 2021.11.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 1의2. “국가지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및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정비·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⑥ 삭제 <2015. 12. 29.>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기본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 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방시설공사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3.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참고사항[현행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개정 부분 표기)]

1

###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 5. 1.] 조례 제2168호, 2024.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스마트도시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법 제19조의5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정보의 제공을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하남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의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쉽도록 센터를 구축하되, 관련 시설과의 안전성·효율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등의 보안 및 정보보호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제7조(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법 제19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수수료의 면제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다.

제8조(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저장·보관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① 시장은 센터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하남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국·단·소장 및 스마트 도시업무 주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공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 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협의 안전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메일**, 메시지 등의 정보통신 수단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실무협의회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도시** 구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2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 대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르며, 적용 대상은 **법 제3조를 따른다.**

제2조의2(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각종 스마트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내용**
2.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대한 시민 의견**
3. **스마트도시 최신기술 검증 및 기술 표준화를 위한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의 협력**
4. **안전,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신기술의 검증, 도입 및 확산**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계획법 제18조에 따른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점 및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 삭제

제5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승인)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직접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를 따른다.

제6조(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 관리·운영)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이하 “시설·서비스”라 한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 통합적·효율적 제공, 통합 보안체계 구축, 담당부서·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고려하여 시설·서비스를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서비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민간업체에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서비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설·서비스 관리·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시설·서비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 통합적·효율적 제공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하남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의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쉽도록 센터를 설치하되, 관련 통합시설과의 안전성·효율성·확장성·호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서비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등의 보안 및 정보보호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제공) ① 시장은 최첨단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신기술의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장은 해당 스마트도시 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 기준 및 방법 등을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① 시장은 센터 및 시설·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부서장 및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3.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공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의거 **해당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고려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협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메시지 등의 정보통신 수단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지원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담당부서·관계 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의2(시민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지원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시행 과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지원과 스마트도시 최신 기술 검증,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시민협의회·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자문 수수료, 연구·조사소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